

주요 업무 보고

2025. 11.

민생사법경찰국

I . 일 반 현 황

1 조직 근거 · 연혁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 －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 －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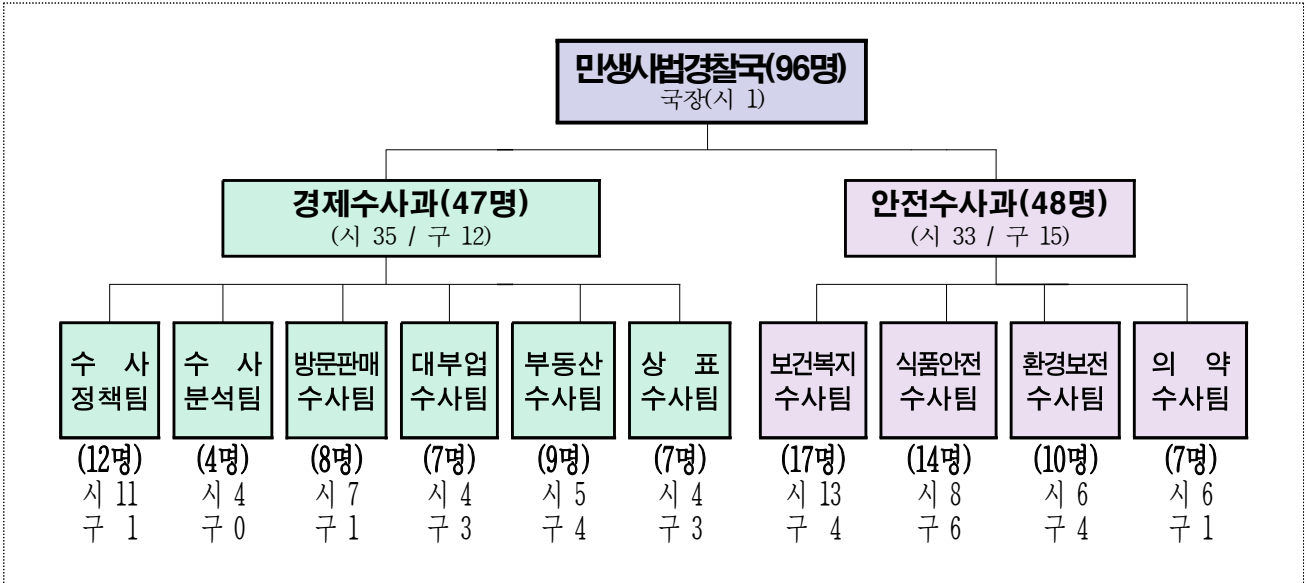
□ 설치 연혁

- ▶ '08.01.01. :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 (1과 2팀, 25개 지원반)
※ 특별사법경찰지원과 82명 (시10, 구72)
- ▶ '08.02.21. : 5개 분야 지명 (식품/공중위생/의약/환경/원산지표시)
- ▶ '08.03.20. : 법률자문검사 파견 (부장검사, 법무부에서 파견)
- ▶ '08.05.27. : 1개 분야 지명 (청소년)
- ▶ '10.11.22. : 1개 분야 지명 (개발제한구역)
- ▶ '12.04.18. : 1개 분야 지명 (상표)
- ▶ '15.08.26. : 4개 분야 지명 (대부업·다단계판매/석유·자동차관리/화장품/의료기기)
- ▶ '15.11.12. :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행정국 내 1단·2반·8팀)
- ▶ '16.02.04. : 1부시장 직속 복수직급(3·4급) 조직으로 독립 (1단·2반·8팀)
- ▶ '18.01.18. : 4개 분야 지명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사회복지시설/시설물안전/부동산)
- ▶ '21.08.04. : 부서 명칭 변경 (기존 민생수사1·2반 ⇒ 변경 경제수사대, 안전수사대)
- ▶ '22.09.08. : 1개 분야 지명 (동물보호)
- ▶ '24.07.01. : '국' 단위 정식 기구로 개편(1단·2대·10팀 ⇒ 1국·2과·10팀)

2

조직 · 인력 현황 ('25.10.10. 기준)

□ 조직 : 1국 2과 10팀



□ 인력 : 총 96명 (시 69명, 자치구 파견 27명)

○ 서울시 : 정원 72명 / 현원 69명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관리운영(6급)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소계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	72/69	37/35	1/1	1/1	8/7	15/13	12/13	35/33	1/1	9/9	19/17	6/6	0/1
경제수사과	37/36	33/31	1/1	1/1	8/7	14/12	9/10	4/4	-	-	3/2	1/2	0/1
안전수사과	35/33	4/4	-	-	-	1/1	3/3	31/29	1/1	9/9	16/15	5/4	-

○ 자치구 : 27명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계	27	26	19	7	-	1	-	1	-
경제수사과	12	12	10	2	-	-	-	-	-
안전수사과	15	14	9	5	-	1	-	1	-

3

부서별 기능

□ 부서별 담당업무

과 별	팀 명	담 당 업 무
경 제 수 사 과 (6개 팀)	수 사 정 책 팀	▶ 조직, 인사,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 개선, 사건 송치 등
	수 사 분 석 팀	▶ 온라인 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 디지털 포렌식, 수사정보포털, 온라인 범죄 신고채널운영 등
	방문판매수사팀	▶ 불법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분야 수사 - 불법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여행)
	대부업수사팀	▶ 불법 대부업 분야 수사 - 미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20%) 초과 수취 등
	부동산수사팀	▶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상 표 수 사 팀	▶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시(공산품) 위반 분야 수사 - 상표 도용, 라벨 같이 등
안 전 수 사 과 (4개 팀)	보건복지수사팀	▶ 공중위생·동물보호·사회복지·청소년 분야 수사 - 이·미용업, 숙박업 등 위생업소 불법행위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동물 학대·유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유해 약물 판매 등
	식품안전수사팀	▶ 식품·원산지 표시(농·수산물) 위반 분야 수사 -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환경보전수사팀	▶ 환경 분야 수사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수사
	의 약 수 사 팀	▶ 의료·의약·화장품·의료기기 분야 수사 - 무면허 의료행위 - 불법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판매 위반행위

II . 예 산 현 황

2025년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세출예산 : 총 1,309백만원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 집행현황(10.10. 기준)		
			증감액	비율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민생사법경찰국 총계	1,618,586	1,308,906	△309,680	△19.1%	852,456	456,450	65.1%
경제수사과 소계	1,579,541	1,170,335	△409,206	△25.9%	761,063	409,272	65.0%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340,305	931,696	408,609	△30.5%	622,079	309,617	66.8%
경제범죄 수사활동 추진	1,340,305	931,696	408,609	△30.5%	622,079	309,617	66.8%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775,865	716,131	△59,734	△7.7%	485,361	230,770	67.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591	41,668	△5,923	△12.4%	33,472	8,196	80.3%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16,849	173,897	△342,952	△66.4%	103,246	70,651	59.4%
행정운영경비	239,236	238,639	△597	△0.2%	138,984	99,655	58.2%
기본경비	239,236	238,639	△597	△0.2%	138,984	99,655	58.2%
기본경비	239,236	238,639	△597	△0.2%	138,984	99,655	58.2%
안전수사과 소계	39,045	138,571	99,526	254.9%	91,393	47,178	66.0%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	87,915	87,915	이체	57,742	30,173	65.7%
안전범죄 수사활동 추진	-	87,915	87,915	이체	57,742	30,173	65.7%
안전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	87,915	87,915	이체	57,742	30,173	65.7%
행정운영경비	39,045	50,656	11,611	29.7%	33,651	17,005	66.4%
기본경비	39,045	50,656	8,106	22.2%	33,651	17,005	66.4%
기본경비	39,045	50,656	3,505	140.5%	33,651	17,005	66.4%

III .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각지대 없는 민생범죄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

- 1-1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수사로 시민피해 최소화
- 1-2 시민생활 안전 위한 범죄예방 홍보 및 신고 활성화
- 1-3 수사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사력 향상

2 경제 취약계층 권익보호 위한 민생경제 침해범죄 수사

- 2-1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 다단계 등 위법행위 수사
- 2-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
- 2-3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
- 2-4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수사

3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접 범죄 엄정 대응

- 3-1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
- 3-2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 3-3 시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불법 식품 집중 수사
- 3-4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분야 불법행위 수사
- 3-5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의료·의약품 위법행위 수사

1. 사각지대 없는 민생범죄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

1.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수사로 시민피해 최소화

2. 시민생활 안전 위한 범죄예방 홍보 및 신고 활성화

3. 수사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사력 향상

1-1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수사로 시민피해 최소화

□ 범죄피해 확산 방지 위한 주요 불법행위 기획수사 집중실시(연중)

- 추진목적 :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 피해 방지
- 추진내용 : 피해 확산 우려되는 주요 범죄를 파악 후 적극적 단속·수사
 - (집값담합) 주거 불안을 유발하는 집값담합 검찰 송치, 불법행위로 인식 확산(1월)
 - (위조상품) 명동 비밀창고 위조상품 1만 6,000여점 압수,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 차단(2월)
 - (수입젤리) 아동·청소년이 선호하는 수입젤리 단속수사로 마약 접근 차단 및 예방활동(7월)



□ 청소년 마약류 범죄 제보 SNS 핫라인 운영으로 신속 대응(11월~)

- 추진배경 : 최근 10대 마약류 사범 증가 및 온라인 통한 유통 급증
 - “심각해진 대한민국 불법 마약… 청소년 100명 중 1명은 이미 경험했다”(매일경제, '25.9.15.)
- 추진내용 : 청소년 불법 약물(마약류) 거래 등 익명 신고접수 후 신속조치
 - (접수) SNS 플랫폼에 전용 신고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등
 - (대응) 유관부서, 교육청·경찰청 등과 협력체계 하에 예방활동 및 신속수사
 - ▶ **예방 홍보** 시민건강국·서울교육청 - **범죄수사** 민생사법경찰국·서울경찰청
- 추진일정 : 운영방안 전문가 자문회의(10월) 후 핫라인 구축·운영(11월~)



작성 자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2133-8805

수사정책팀장: 김현숙 ☎8810 담당: 김혜나 ☎8811
수사분석팀장: 오현민 ☎8820 담당: 남용우 ☎8823

1-2 시민생활 안전 위한 범죄예방 홍보 및 신고 활성화

□ 누구나 알기 쉬운 일상생활 속 범죄 피해 예방법 홍보 중점 실시(연중)

- 추진내용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범죄 유형별 예방법 소개로 선제적 피해 예방
- 추진실적 : 민생침해범죄 취약 분야별 맞춤형 홍보 총 5건
 - 보도자료 배포, 전단지 등 안내물 제작·배부, 카드뉴스 온라인 게재 등

건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품)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마크 표시 확인법(4월) · (아동식품) 젤리 등 성분의심 해외직구식품 구매법(7월) · (의료기기) 무좀 치료기 등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확인법(7월) 	
경제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단계) 불법 금융다단계 핵심 체크리스트 배포(7월) · (사금융) 등록 대부업체 확인법, 연이자율 계산법(9월) 	

□ 범죄 취약층 대상별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 및 신고 독려(연중)

- 추진내용 : 범죄 유형별 취약 대상을 전략적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홍보 실시
- 추진현황 : 범죄 취약층 및 취약지역 대상으로 타기팅 홍보 총 8건
 - (다단계) 대한노인회 홍보·안내(3·8월), 강남구 테헤란로 배너 설치(3곳, 10월)
 - (대부업) 성매매·유형업소, 중고차시장, 전통시장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신고안내(3월, 9월)
 - (부동산) 1인가구 밀집지역(3월, 10월), 전세사기 발생 대학가(12월) 등 범죄피해 신고 홍보



중소 전통시장 내 홍보



1인가구 밀집지역 내 홍보

1-3

수사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사력 향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운영(연중)

- 교육목적 : 시·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로 범죄피해 최소화
- 교육대상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서울시 타 실국 및 자치구, 서울 소방 포함)
- 교육내용 : 특사경제도 및 형사소송법의 이해, 수사서류 작성 실무 등
- 추진실적 : 교육 16회 총 556명
 - (신규자 직무) 특사경제도 및 법령, 임의·강제 수사절차 등 기본교육 3회 272명
 - (경력자 심화) 체포·압수영장, 잠복·추적수사, 마약류 범죄수사 등 8회 209명
 - (특화전문분야)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 양성, 수사 보도자료 작성법 등 5회 75명



'25. 하반기 수사관 기초실무교육



경력수사관 심화교육(마약류 범죄)

□ 범죄 대응 및 수사공조 역량 제고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추진배경 : 범죄피해 조기 차단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도모
- (범죄차단) 유해 전단지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
 - 체결기관 : 서울교통공사(3월), 서울경찰청(7월)
 - 협력내용 : 불법 전화번호 자동경고발신시스템("대포킬러") 활용 확대 및 수사 공조
- (공동협력) 제도개선 등 공조 위한 '시·도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운영
 - 서울·경기·인천 협력 간담회 개최 후 수도권부터 단계별 확대 추진(11월~)
 - ※ 협의체 구성·운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0월 말)
- (광역수사) 광역적 환경범죄 대응 위한 '환경범죄 광역수사협의체' 구성
 - 환경부 및 전국 시·도 참가 : 간담회 등 준비회의(9월), 정례회 개최(11월~)

작성 자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2133-8805 수사정책팀장: 김현숙 ☎8810 담당: 김혜나 ☎8811

2. 경제 취약계층 권익보호 위한 민생경제 침해범죄 수사

1.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 다단계 등 위법행위 수사

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

3.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

4.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수사

2-1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 다단계 등 위법행위 수사

□ 방문판매분야 **주요 이슈 관련 기획수사** (연중)

- 수사배경 : '24년 하반기 언론보도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수사 필요
- 국가산단 파고든 불법 다단계(연합뉴스, '24.10.), 노인 1,700명 울린 '뺏다방'(중앙일보, '24.7.)
- 수사대상 : 「방문판매법」의 절차 및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
- 수사방법 : '기획수사 전담반' 편성·운영(2인 1조)을 통한 신속 수사
- 수사실적 : **입건 6건 9명**(국가산단 : 4건 7명, 뺏다방 : 2건 2명)

□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용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수사** (연중)

- 수사배경 : 고령층 대상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증가로 시민 피해 우려
- 수사대상 :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등
- 수사방법 : 현장방문 등으로 범죄혐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법행위 확인
- 수사실적 : **입건 4건 9명**



불법 다단계업체 사업설명회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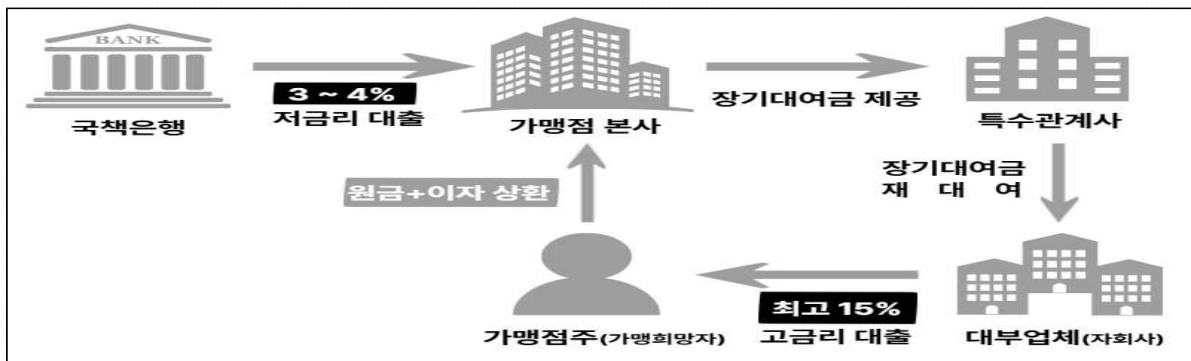
압수수색검증 압수물 확인 장면

□ **깎세(단기임대) 사무실을 이용한 불법 금전거래 행위 수사** (연중)

- 수사배경 : 노인, 중장년층 대상 불법 다단계 방식 금전 수취행위 성행
- 수사대상 : 깎세 사무실을 이용한 **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 행위**
- 수사방법 : 현장 잠입 등으로 사업내용 및 다단계 조직 구성 여부 입증
- 수사실적 : **입건 1건 2명**

2-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

- **정책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 대상 신종 불법사금융 수사** ('24.9월~)
 - 수사배경 : 대형 프랜차이즈의 미등록 대부업 불법 영업 관련 수사 의뢰
 - 수사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자회사 활용 **미등록 대부업** 불법 영업
 - 수사방법 : 전담 수사반 편성, 자치구·경찰 등 공조 통한 심층수사
 - 수사실적 : 입건 1건, 1명(11월 중 검찰 송치예정)



- **미등록 대부,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등 불법 대부행위 수사** (연중)
 - 수사배경 : 금융 취약계층 대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사례 다수 발생
 - 수사대상 : 미등록 대부, 미등록 대부 광고 및 법정이자율(20%) 초과 수취 등
 - 수사방법 : 탐문 및 정보활동 강화로 불법 대부 행위 증거확보 및 수사
 - 수사실적 : **입건 25건, 36명** ※ 미등록 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 91회선

- **영세상인·청소년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추진** (연중)
 - 수사배경 : 영세상인, 성매매 종사자, 청소년 등 금융 취약계층 불법 대부 피해 예방
 - 수사대상 : 불법 대부 중개,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 등
 - 수사방법 : 전통시장, 성매매 집창촌, 고등학교 등 주변 정보활동을 통한 증거수집
 - 홍보활동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 및 신고 방법 안내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 43,000부 배부 및 홈페이지 팝업 게시

2-3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

□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연중)

- 수사대상 : 집값담합 유도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훼손 행위
 -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 중개사자격증 대여 및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등
- 수사방법 : 시민 제보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행위 증거 수집
- 수사실적 : **입건 54건, 62명**

✓ 주요성과 : '25. 1월 서울시 최초 집값 담합 적발·검찰 송치(3건 총 5명)

□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불법행위 수사 (연중)

- 수사대상 :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 및 위장전입 부정청약 등
 -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상속 제외)·알선 행위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 수사방법 : 청약경쟁률 높은 인기 아파트 분양 당첨자 집중 점검
- 수사실적 : **입건 4건 4명**(청약통장 매도자, 분양권 매수예정자 및 알선자 등)



□ 온라인상 불법 광고 등 위법행위 기획수사 (9~12월)

- 수사대상 :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대상물 광고 및 표시행위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유인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면제', '이사비 지원' 등 광고
- 수사방법 : 인터넷 카페, 직거래 앱, 유튜브 영상 등 모니터링 및 제보 수사
- 홍보활동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홍보물 제작·배포(리플릿·전단지 17,000매)

2-4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수사

□ **대규모 창고형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기획수사** (연중)

- 수사배경 : 대규모 창고형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를 통한 불법행위 증가
 - － 대규모 위조상품 공급지역 :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
- 수사대상 :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법 위반행위
- 수사방법 : 기획수사 및 민원제보, 정보활동으로 대규모 창고형 상가 현장 적발
- 수사실적 : **입건 3건, 물품 8,569점 압수**
 - － 명동 미OO : 대규모 비밀창고 운영 업체로 2명 입건, 물품 1,200점 압수
 - － 장안동 창고 : 대규모 온라인 라이브 판매 업체로 1명 입건, 물품 7,369점 압수

- ✓ 주요성과 : 명동 대규모 위조상품 비밀창고 운영 일당 적발('25.2.20. 보도)
 - ▶ 위조상품 대량공급자 2명 입건, 해외명품 브랜드 1,200점 압수, 정품 추정가 약 38억 원

□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동대문 새빛시장 불법행위 수사** (연중)

- 수사대상 :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 수사방법 : 불시점검을 통한 현장 적발 시 위조상품 압수 후 수사 진행
- 수사실적 : **입건 27건, 물품 1,065점 압수**

※ 합동 캠페인 실시 : '짜통 OUT, 정품 OK!'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 참여('25.5.26.)

- ▶ 참여기관 : 서울시(민사국), 특허청, 중구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 등



장안동 위조상품 창고 전경



새빛시장 수사 현장

작성 자

경제수사과장 : 강희은 ☎2133-8805 상표수사팀장 : 전 혁 ☎8870 담당 : 정서영 ☎8872

3.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접 범죄 엄정 대응

1.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

2.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3. 시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불법 식품 집중 수사

4.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분야 불법행위 수사

5.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의료·의약품 위법행위 수사

3-1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

□ 체육시설 내 불법 찜질 시설 설치 기획 수사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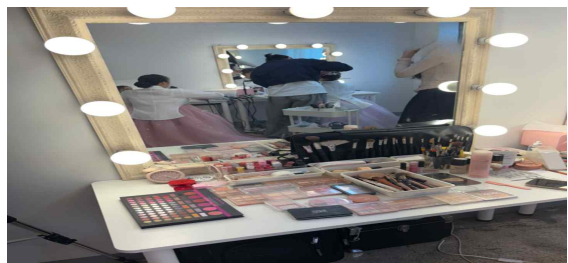
- 수사배경 : 체육시설 내 불법 찜질 시설 설치 민원 발생 증가
- 수사대상 : 불법 찜질 시설(무신고 목욕장업) 설치 의심업소 52개소
- 수사방법 : 온라인 조사(블로그 등)를 통해 무신고 목욕장업 현장 확인
- 수사실적 : 입건 19건 19명

□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내 무신고 미용업 행위 수사 (8~10월)

- 수사배경 : 무자격자의 관광객 대상 헤어 및 메이크업 서비스 성행
- 수사대상 : 한복대여점 중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 수사방법 : 민원 제보 및 현장 방문을 통한 불법행위 확인
- 추진현황 : 의심업소 38개소 기 선정, 단속·수사 추진(예정)



체육시설 내 찜질시설



한복대여점 내 미용 재료·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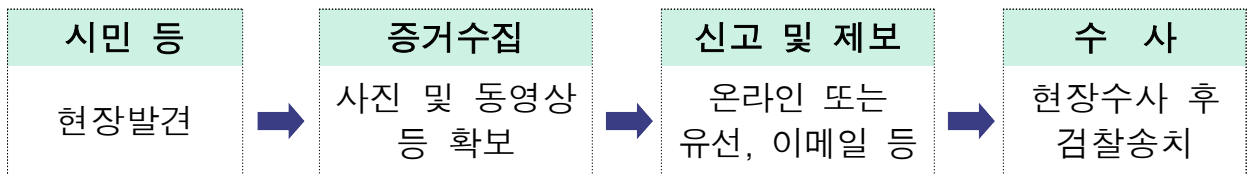
□ 공유 숙박사이트 등 불법 숙박업소 지속 수사 (연중)

- 수사배경 : 불법 숙박 행위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수사대상 :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 수사방법 : 시민신고, 자치구 민원 등 의심 사례 확인 후 수사 실시
- 수사실적 : 입건 73건, 75명

3-2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 동물 학대·유기 등 불법행위 수사 (연중)

- 수사배경 : 다양한 유형의 동물 학대·유기 등 위법사례 계속 발생
- 수사대상 : 동물 학대·유기·관리 보호 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 수사방법 : 관련 단체, 시민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불법행위 채증



- 수사실적 : 입건 9건, 9명
- 홍보활동 : 동물보호법 위반사례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안내('25.6.)
 - 맹견사육 허가제, 동물학대 신고 방법 등 안내문 5,000부 25개 자치구 배부

□ 등록 영업장 외 불법 동물미용업 행위 수사 (9월~)

- 수사배경 :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미용업 영업행위 발생
- 수사대상 : 등록된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동물미용업 영업행위
- 수사방법 : 자체 정보활동 및 자치구 협력을 통한 범죱험의 확보
- 수사실적 : 입건 3건, 3명



사육관리위반



영업장 외 동물 미용 행위

작성 자

안전수사과장 : 유효연 ☎2133-8807 보건복지수사팀장 : 이철명 ☎8940 담당 : 유현지 ☎8961

3-3

시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불법 식품 집중 수사

□ 아동·청소년 해외위해식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수사 (7~9월)

- 수사배경 : 국내 아동·청소년 해외위해식품 확산 우려에 따른 수사 필요성 대두
 - 젤리에 대마초가... 네덜란드서 하리보 일부 상품 리콜(연합뉴스, '25.5.30.)
 -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적발(해럴드경제, '25.5.29.)
- 수사대상 : 학원가 주변 수입식품 취급업소
- 수사실적 : **입건 2건 2명**
 - 수입식품 미신고(해외직구식품) 1,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1
 - ※ 위해성분 의심제품 30건 수거·검사 결과, 마약류(10종) 불검출, **고카페인 3건 검출**

✓ 주요성과 : 아동·청소년 대상 홍보 강화(서울교육청 협업)

- ▶ 카드뉴스 제작 : 市 누리집, 市 교육청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
- ▶ 언론매체 보도 : 해외식품 소비기한 확인 방법 등 언론보도(YTN 등 22개 매체, '25.9.2.)

□ 김장철 농산물 제조·유통·판매 위법행위 수사 (9~12월)

- 수사배경: 농산물 수입 증가로 김장철 식재료 불법 행위 수사 필요
- 수사대상: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 제조·유통·판매업자
- 수사방법: 김장철 원산지 거짓표시 전담 수사반 편성·운영(4개반 12명)
- 홍보계획: 고춧가루 등 주재료의 국내산-중국산 구분법 안내 등



해외수입식품 판매업소 단속



김장철 농산물 원산지 단속

작성 자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2133-8807 식품안전수사팀장: 김태섭 ☎8900 담당: 박은숙 ☎8931

3-4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분야 불법행위 수사

□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수사 ('24.12~'25.4월)

- 수사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한 동절기(12~3월)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필요
- 수사대상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자동차 불법도장 등 450여 개소
- 수사방법 : 사전조사,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현장 잠복 등
 - 언론 사전예보('24.12.19), 서울시 영상매체 등을 활용 위법행위 신고 홍보(3.10-25) 병행
- 수사실적 : **입건 28건 39명**
 - (비산먼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7) 및 미조치(4)
 - (불법도장)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16),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1)

✓ 주요성과 :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주택가 불법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25.4.29. 보도)
▶ SBS, KBS, jtbc, MBN 등 방송보도, 내일신문, 연합뉴스 등 23개 매체 보도

□ 의료폐기물 배출 위법행위 수사 (3~10월)

- 수사배경 : 수술 후 의료폐기물(조직물류, 손상성 등) 불법배출 정황 인지
- 수사대상 : 성형외과의원 등 120여 개소
- 수사방법 : 의심사업장 사전 조사, 강남·서초·송파구 합동단속
- 수사실적 : **입건 25건 25명**
 -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보관 전용용기 사용관련 위반 등



수사결과, SBS뉴스 보도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작성 자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2133-8807 환경보전수사팀장: 최희경 ☎8850 담당: 최지혜 ☎8863

3-5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의료·의약품 위법행위 수사

□ **재래시장에서의 불법 한방약품 판매 및 의료행위 등 수사** (1~7월)

- 수사배경 : 오랜 기간 의약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의 불법행위 위협인지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업소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 등
- 수사대상 : 한의원, 한약국, 한약도매상 등 의약업소
- 수사방법 : 관할 보건소의 업소명단 확보 후 현장조사·증거수집
- 수사실적 : 입건 6건 6명(불법 의약품판매 5명, 의원미개설 한의원 운영 1명)

□ **의약품·의료기기 불법수출 의원 등 수사** (6월~)

- 수사배경 : 수출업자를 통한 의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해외수출 행위 발생
- 수사대상 : 보톡스, 필러 등 의약품 불법수출 의원 8개소
- 수사방법 : 서울세관의 수출 관련자료 분석 후 피의자의 혐의 입증
- 수사실적 : 입건 5건 5명

□ **불법 의료행위 상시 수사** (연중)

- 수사배경 : 불법 의료행위 적발 사례 발생 및 언론보도 확산
- 치과 의사, 한의사 불법행위 적발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 언론보도 지속
- 수사대상 :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등
- 수사방법 : 자치구 민원, 응답소 민원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 수사실적 : 입건 2건 2명(무면허의료 2명)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한방약품 판매

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21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1	16	5	-	-
	시정·처리요구사항	11	9	2	-	-
	건의사항	7	5	2	-	-
	기타(자료제출 등)	3	2	1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내수면 분야 한강 수상시설물 및 선박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수요가 있는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되면 수상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미래한강본부와 공조하여 내수면 수상 분야가 추가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근거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6조 ○ 지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요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서울시 특사경은 중앙지검에서 지명)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 ※ 미래한강본부에서 지명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발굴(市 미래한강본부) : '24.8.13. ○ 행정안전부 건의(市 법무담당관) : '24.8.29. ○ 법무부에 개정 검토 요청(행정안전부) : '24.9.27. ○ 법 개정 의견 조회(법무부) : '24.10.29. ○ 의견 조회 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검토 의견</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관 법령</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검찰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신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법경찰직무법」 관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안전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선 및 도선사업법」</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양경찰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상레저안전법」</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용 곤란</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상교통안전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 권한 부여 부적절</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강본부와 공조하여 법률 개정 요청 : 계속 	기관명	검토 의견	소관 법령	비고	대검찰청	회신 없음	-	「사법경찰직무법」 관련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수산부	수용 곤란	「해상교통안전법」	지자체 권한 부여 부적절
기관명	검토 의견	소관 법령	비고																		
대검찰청	회신 없음	-	「사법경찰직무법」 관련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수산부	수용 곤란	「해상교통안전법」	지자체 권한 부여 부적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사국 직원의 재직기간이 1~2년이 50%가 넘는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국 직원 후생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테랑 수사관-신규수사관 멘토링제 실시 : ('24년) 8팀, ('25년) 4팀 - 저연차 직원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24.10월 - 올해의 우수수사관 선정 인원 확대 : ('23년) 3명 → ('24년) 4명 ○ 유관기관 표창 추천 및 선정 : 총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특허청장 표창 각 1명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교육 실시 : 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작성방법, 디지털포렌식, 마약대응 역량 강화교육 등 분야별 실무교육 등 ○ 2025년 상반기 수사실무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실무교육 : '25. 2. 12.(수) ~ 2. 14.(금) (3일간) - 수사 심화교육 : '25. 2. 17.(월) ~ 2. 18.(화) (2일간) ○ 하반기 수사실무 교육 기간 확대 운영 : ('24년) 3일 → ('25년)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교육과정 : '25. 9. 3.(수) ~ 9. 5.(금) (3일간) - 심화 교육과정 : '25. 9. 11.(목) ~ 9. 12.(금) (2일간) ○ 내부소통 활성화를 위한 '부패뒤집기' 대결전 실시 : '25. 9. 2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사례 발굴 지속 노력 : 계속 ○ 직원간 소통강화를 위한 경계허물기 프로그램 추진 : '25. 10~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사국에 접수된 ‘범죄 신고’에 대해서 소관이 아닌 경우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세부적인 안내시스템을 매뉴얼화해 신고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신고’ 민원 중 타 기관 소관 민원은 ‘일반민원’ 유형으로 민원 종류를 바꾸어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민원인의 이메일 혹은 주소를 알 수 없어 이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민원·소관 기관의 사이트 링크 및 전화번호를 첨부하여 상세히 안내 <p>※ 2024년 범죄신고는 총 1,365건 접수하였고, 이 중 208건(15.2%)은 일반민원으로 변경 후 타기관으로 이첩됨</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으로 신속히 이첩, 이첩 불가능한 경우 사이트 링크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이첩에 신속 대응 및 시민 편의 증진 도모
<p>○ 서울시 누리집 민생사법경찰국 직무범위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환경보전 분야에 청소년보호가 포함되어 있음. 민생사법경찰국의 직무구분이 잘못된 것으로 즉시 시정할 것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누리집 직무범위 수정 완료('24년 11월) - (기존) ‘민생경제’, ‘보건건강’, ‘환경보전’ 상위 분류 삭제 - (변경) 민생사법경찰국 직무범위를 수사분야별 분류로 일원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사항 즉시 반영 및 시민들의 편의 증진 : 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온라인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이 보안 및 해킹 방어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지명분야는 아니지만 이번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수사에 필요한 분석 및 대응 역량을 갖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발시 소스코드 취약점 방어를 위한 시큐어코딩 적용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완료('24.12월) ○ 제한된 사용자(민생사법경찰국 소속)만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中 ○ 대상자 등 주요 민감정보 DB 암호화 조치완료('24.12월) ○ 향후 사이버 수사 분야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기 위한 유연한 시스템 구조 및 기반 구축('24.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보안 침해 및 해킹 기술 동향 파악으로 시스템에 방어 수단 적기 적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방문판매 등 주로 노인 피해가 많은 범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함. 경로당,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등 주민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지역 내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p> <p>(경제수사과)</p>	<p>□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 추진내용 : 자치구와 연계한 기획 수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대상 : 홍보관(일명 ‘뺏다방’)을 개설하여 노인 등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하는 업체 ○ 수사방법 : 현장 정보활동을 통한 증거 수집 후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하여 수사 진행 <p>※ 25개 자치구 최근 5년간 ‘뺏다방’ 행정조치 현황 분석(’24.11.28)</p> <p>□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수사 협조 요청 : ’25.1.22. ○ 자치구 소식지(4월호) 게재 요청 : ’25.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다단계 범죄 사례 및 신고 방법 안내’ 공문 발송(홍보담당관) ○ 자치구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홍보 협조 요청 : ’2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다단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자치구 수사 의뢰(2개구) 접수 : ’25.3.17, 3.21. ○ 수사 의뢰 2건 송치 완료 : ’25.6.17,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방문판매업(일명 ‘뺏다방’) 운영 혐의 ○ 자치구 및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홍보 협조 재요청 : ’25.8.12.
<p>○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 위반 의류뿐만 아니라 철강(주방용품) 등 라벨같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필요.</p> <p>(경제수사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일시 : 총 3회(’25년 4월, 6월, 8월) - 단속장소 : 종로구 창신동 일대 라벨같이 업소 밀집지역 - 단속내용 : 의류, 신발 등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 단속결과 : 적발 건수 없음 ※ 11월 추가 실시 예정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정례수사 실시 :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구 창신동 등 라벨같이 의심 지역 중심 수사 전개 ※ 자치구(종로구)와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 효과 제고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피해자 성향 분석에 기반한 범죄예방 안내 및 홍보 활동 강화 필요. 예컨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대자보 게시판이나 청년 밀집지역 카페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피해 유형별 협업 대상의 전략적 선정과 피해자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p> <p>(경제수사과, 안전수사과)</p>	<p>□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 추진내용</p> <p>○ 분야별 홍보</p> <p>(1인가구 밀집지역 불법중개행위) 예방 홍보물 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시기 : '25. 9. ~ 10. - 홍보종류 : 리플릿 및 전단지 각 17,000매 - 홍보방법 : 청년층 등 1인가구 밀집지역(20개동) 중개업소 및 동주민센터 내 부착 - 홍보내용 : 부동산범죄 수사범위 및 주요사례,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 <p>(성매매·유혹업소 종사자 대상 불법 사금융 예방 홍보) 안내문 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시기 : '25.3.17. ~ 3.27. - 홍보내용 : 6개 유혹업소 밀집지역 각 50개 업소 총 300여 업소 방문하여 2,000매 안내문 배부 <p>(동물 학대 신고 및 제보)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부 시기 : 2024. 12월 / 2025. 6월 - 내 용 : 동물학대 행위 신고 및 제보 안내 - 제작 수량 : 7,000매(포스터 2,000매 / 리플릿 5,000매) - 배 부 처 : 시·자치구(동물보호 부서), 외부·방문기관 등 <p>(불법 다단계) 범죄 사례 및 신고방법 안내문 및 카드뉴스 제작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시기 : '25. 3월, 8월 - 홍 보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 자치구 및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25개 구지회) ▶ 카드뉴스 : 페이스북, 서울시 누리집 - 홍보내용 : 불법 다단계 범죄 사례 및 신고방법 안내 <p>(해외직구식품 불법행위 사례 및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카드뉴스 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시기 : '25. 7월 - 홍보매체 : 서울시 누리집, 페이스북(서울시 교육청과 협업) - 홍보내용 : 해외직구식품 불법행위 사례 및 올바른 구매방법 홍보 <p>□ 향후계획</p> <p>○ 특정 범죄 취약계층 등 대상 지속적인 범죄예방 홍보 : 연중</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청소년에게 마약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한 수사권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행하지 않음. 지명된 직무범위 내에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p> <p>(안전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마약 대응 역량 강화 직원 교육 실시 : 총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4. 12. 13., '25. 2. 5., '25. 2. 13., '25. 3. 13. - 강사 :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 '25년 제1차 마약대응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25.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부서)별 마약대응사업 추진계획 공유 및 논의 ○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 참석 ('25.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협력체계 등 협업 방안 논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마약 SNS 신고센터 개설·운영 추진중('25.10월~) 										
<p>○ 동물보호단체와 협업 활동이 미흡하며, 하반기에는 협업 실적이 거의 없었음. 민생사법경찰국은 인력 부족으로 타 기관과의 협조 및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효과를 분석해 협업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p> <p>(안전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약 <table border="1" data-bbox="576 1373 1442 1760"> <thead> <tr> <th data-bbox="576 1373 783 1429">협약 기관</th> <th data-bbox="783 1373 1442 1429">협약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76 1429 783 1514">서울시 수의사회 (24. 12. 11.)</td> <td data-bbox="783 1429 1442 1514">- 동물학대 범죄 발생 추이 및 동물보호 수사 협조 요청 - 동물유기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련</td> </tr> <tr> <td data-bbox="576 1514 783 1599">(사)동물자유연대 (24. 12. 12.)</td> <td data-bbox="783 1514 1442 1599">- 불법 개도축 근절을 위해 동물학대 신고 대응방안 공유 - 동물보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td> </tr> <tr> <td data-bbox="576 1599 783 1684">(사)나비아사랑해 (24. 12. 13.)</td> <td data-bbox="783 1599 1442 1684">- 최근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 내용 공유 및 동물보호 수사 협조 요청</td> </tr> <tr> <td data-bbox="576 1684 783 1760">(사)카라 (24. 12. 16.)</td> <td data-bbox="783 1684 1442 1760">- 동물유기 및 경기도 등 개 도살 현장 사건 접수시 대응방안 협의 - 유형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단체 등과 연 2회 이상 간담회 개최(9월, 12월) ○ 시·자치구 동물 관련 부서와 협력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협약 기관	협약 내용	서울시 수의사회 (24. 12. 11.)	- 동물학대 범죄 발생 추이 및 동물보호 수사 협조 요청 - 동물유기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련	(사)동물자유연대 (24. 12. 12.)	- 불법 개도축 근절을 위해 동물학대 신고 대응방안 공유 - 동물보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	(사)나비아사랑해 (24. 12. 13.)	- 최근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 내용 공유 및 동물보호 수사 협조 요청	(사)카라 (24. 12. 16.)	- 동물유기 및 경기도 등 개 도살 현장 사건 접수시 대응방안 협의 - 유형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협약 기관	협약 내용										
서울시 수의사회 (24. 12. 11.)	- 동물학대 범죄 발생 추이 및 동물보호 수사 협조 요청 - 동물유기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련										
(사)동물자유연대 (24. 12. 12.)	- 불법 개도축 근절을 위해 동물학대 신고 대응방안 공유 - 동물보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										
(사)나비아사랑해 (24. 12. 13.)	- 최근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 내용 공유 및 동물보호 수사 협조 요청										
(사)카라 (24. 12. 16.)	- 동물유기 및 경기도 등 개 도살 현장 사건 접수시 대응방안 협의 - 유형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내 실내동물원 4곳이 있으나 실내공간 특성상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실내동물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실내동물원 운영 관련 전수조사에 나설 것 (안전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동물원 현장 방문 및 운영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4. 11. 12. ~ 11. 14. - 대상 : 마포구 테이블에이, 도봉구 헬로애니멀, 금천구 주라리움 금천, 영등포구 주식회사 주렁주렁 - 인원 : 총 4명 (안전수사과 2명, 동물보호과 2명) - 내용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여부 확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관부서인 동물보호과와 협업으로 조사 실시 - 결과 :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의심 정황 미발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동물원 내에서 동물 학대 행위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바디캠, 액션캠 등)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계 운영 시에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수사장구, 장비에 대한 내부규정 마련 필요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반드시 규정토록 하는 근거가 없어 대검찰청 주관 특사경 책임자 회의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회 요청 : '16.3., '17.9., '18.11., '19.11., '22.11., '23.11., '24.11. - 「사법경찰직무법」에 수사장구 사용과 관련된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요청 ※ 일반 사법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53년) 및 수갑 등 경찰장구('81년) 근거 마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건의 : '25. 2~11월
<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임기 만료 폐기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재개발 사업 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 : '25.2.27.(법무부,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재개발 증가시 관련 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대응 - 범죄 유형: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 기존 법개정 건의 : 2022. 3. 17.(임기만료 폐기)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재개발 비리 범죄 수사권 확보 노력 : 계속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계시판이 서울시 응답소 로 통합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 링이 요구됨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누리집 홈페이지)의 경우, 민원 응답 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별도의 알람 기능이 없어 처리 기한을 경과하여 답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 업무관리시스템 미연계로, 답변 2회 처리(내부결재 후 범죄신고센터 답변 별도 등록)로 인해 신속한 민원 대응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응답소’ 일원화 추진('24.5.29.) ○ 서울시 응답소 통합 이후 현재까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응답소’ 통합 관련 불편 민원은 '25.9.30. 기준 0건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응답소’ 통합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 계속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중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되는바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경제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보조원 등의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시기 : '25. 1. ~ 12. - 수사대상 : 중요사항 거짓언행,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전반 - 수사방법 : 부동산정보 카페 모니터링 등 정보활동 및 사건 접수시 다른 범죄에 우선하여 수사 진행 ○ 1인가구 밀집지역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시기 : '25. 9. ~ 10. - 홍보종류 : 리플릿 및 전단지 각 17,000매 - 홍보방법 : 청년층 등 1인가구 밀집지역(20개동) 중개업소 및 동주민센터 내 부착 - 홍보내용 : 부동산범죄 수사범위 및 주요사례,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 ○ 전세사기는 소관 경찰청으로 신고 접수 즉시 이관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부동산 범죄 수사 및 예방 홍보에 집중 ※ 전세사기 청년층 등 피해자 지원 : 주택실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깡통전세 ‘불법중개행위’ 신고 접수 시 신속 수사 : 연중
<p>○ 대포킬러 기능 개선으로 청소년 유해전단지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확대 예정인 불법 의약품, 불법 대부업 외에도 타 민생침해분야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함 (경제수사과, 안전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합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유해전단지 ('24년 7월), 불법 의약품 ('24년 10월) - 경제수사과 불법 대부 전단지 시행('25.2.1.~) ※ 불법대부 광고 대포킬러 운영절차 변경계획(경제수사과-1216, '25.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대포킬러시스템 서비스 종료('25.1.10.) ○ 불법 전단지 차단 대포킬러 공조 협약 추진계획(안전수사과-9288, '25.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식 : '25.7.31. / 대상 : 서울경찰청 ○ 자치구 불법광고물 대포킬러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시기 : '25. 2월 ~12월 - 입력 대상 : 청소년 유해 매체 대포킬러 미 설치 13개 자치구 - 입력 실적 : 36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분야 대포킬러(자동경고발신시스템) 활용 홍보 : 계속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 간 수사 범위와 권한 충돌 문제는 중요한 사안임.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할 충돌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명 사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경제수사과, 안전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근거함 ○ 일선 경찰서의 경찰공무원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및 제197조(사법경찰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두 기관 간 수사범위와 권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을 지속하고, 민사국 소관 범죄는 적극 수사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및 수사 공유 등 경찰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소관 범죄는 적극 수사 : 계속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인 단속 요청 (안전수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숙박업소 집중 수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최근 5년간 불법 숙박업소 입건현황 > <table border="1" data-bbox="592 555 1375 640"> <thead> <tr> <th>연도</th> <th>2025. 9</th> <th>2024</th> <th>2023</th> <th>2022</th> <th>2021</th> <th>2020</th> </tr> </thead> <tbody> <tr> <td>입건(건)</td> <td>73</td> <td>151</td> <td>100</td> <td>17</td> <td>8</td> <td>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비앤비 코리아서울경찰청 관계자 간담회 실시('24.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숙박플랫폼(에어비앤비)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의 근절을 위해 에어비앤비 대응 현황 공유 -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서울 시민의 관광 질서 확립 제고 ○ 불법 숙박업(에어비앤비)관련 유관부서 회의 참석('24.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숙박업 양성화 제도개선 및 단속방안, 쟁점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업소 영업신고증 제출 유예기간: 2024.10.2.~2025.10.15. ○ 서울시-부킹닷컴 간담회 실시('25.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킹닷컴 불법 숙박업소 관리 등 협력방안 논의 ○ 불법 숙박업(에어비앤비) 관련 간담회 실시('25.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중고거래플랫폼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숙박업소 검찰 송치 후, 에어비앤비측에 사이트 삭제 요청 및 국세청 통보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비앤비, 국내 숙박업체 영업신고 의무화 시행('25.10.16.) ○ 기업형(대규모) 무신고 숙박업소 기획수사 추진 : '25.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텔·빌라 등 숙박업 신고 불가 건물 집중 단속 	연도	2025. 9	2024	2023	2022	2021	2020	입건(건)	73	151	100	17	8	10
연도	2025. 9	2024	2023	2022	2021	2020									
입건(건)	73	151	100	17	8	10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민생사법경찰국 미파견 자치구 사유 (경제수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4. 11. 11.)
○ 대외무역법 위반 라벨갈이 단속실적(21, 22년) (경제수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4. 11. 11.)
○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보고 (경제수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① 대규모 창고형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수사(연중) - 수사대상 : 중구, 용산구 등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지역 - 수사방법 : 해당 자치구, 경찰서, 특허청 등과 정보활동 공유 및 현장 탐문 활동으로 수사대상 특정 - 수사실적 : 1건(수사중) ②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연중) - 수사대상 : 온라인 대형 플랫폼, SNS 등 온라인 유통망 전반 - 수사방법 :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 수사실적 : 1건(수사중)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①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위조상품 판매 예방 - (오프라인) 대규모 창고형 위조상품 유통업자 수사로 온라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물량 차단 -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위조상품 판매자의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댓글 등으로 처벌에 대한 안내 문구 등록 ②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범죄 대응 - 전국단위 온라인 유통업자의 경우 경찰·특허청 등과 협력 추진